

# 당신의 양심에 **안심**을 더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
##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이란?

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 
( '11. 9. 30. 시행)

## 「공익침해행위」는 어떤 것인가요?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·허가 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## 「공익침해행위」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!

-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② 소관 행정·감독기관
- ③ 수사기관
- ④ 국민권익위원회
- ⑤ 국회의원
-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

##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!

보호 조치	신분비밀보장 →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·보도하는 행위 금지
	신변보호 →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	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→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

## 공익신고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

➔ **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**

## 공익신고로 치료·이사·쟁송·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

➔ **구조금 지급**

##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!

-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
-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##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!

제재 유형	위반 유형
징계 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·보도</li> <li>● 불이익 조치를 한 자</li> </ul>
벌칙	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	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	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# 보호는 이렇게 해요!

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,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.

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**국민권익위원회**에 신고하였다.

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,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.

Tip

B는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징역 1년, 추징금 20억 5,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.

##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?

수입업체 대표B, 관할 시·군·구청, 식품의약품안전청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, 국회의원



##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,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,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·이사비·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



##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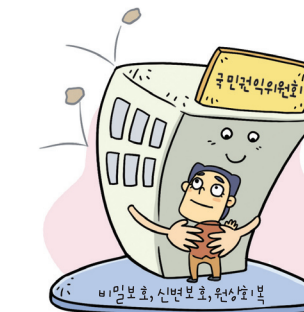
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「벌칙」에 해당

※ 「식품위생법」 제 94조  
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

##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



##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

